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9. 7.(일) **브리핑 시작 시**

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

□ 행정안전부는 9월 7일(일) 17시 30분,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「정부조직 개편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조직국 조직기획과	책임자	과 장	태병민 (044-205-2301)
		담당자	서기관	김성순 (044-205-2302)

정부조직 개편방안

2025. 9. 7.



행정안전부

|| 목 차 ||

I. 개편 방향	1
----------------	---

II. 개편 방안	2
-----------------	---

(참고 1) 개편 후 정부 기구도	6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참고 2) 정부조직개편 개관	7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개편 방향

◆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, 국민주권, 혁신경제,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 추진

□ 추진 배경

-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
-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개편 추진
- 정부 초기,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,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개편

□ 개편 방향

-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·재배치
- 기후위기,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
-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·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처 역할 강화

II. 개편 방안

1.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

※ '26.1.2. 시행

□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⇒ 「기획예산처(국무총리 소속)」 신설

-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,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,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
-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, 재정정책·관리,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

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⇒ 「재정경제부(경제부총리)」 개편

-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·조정, 세제, 국고(결산 포함) 기능 등을 수행하고,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
- '공공기관운영위원회'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,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*

* 재경부장관·민간 공동위원장, 상임위원(고위가급) 신설, 사무국 신설(공공정책국 이관)

2.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

※ '26.1.2. 시행

□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⇒ 「재정경제부」 이관

- 국내·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(금융정보분석원 포함)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

□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⇒ 「금융감독위원회」 개편

-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, 위원회에 '증권선물위원회'와 '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'를 설치
-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(금감원에서 분리·신설) 공공기관 지정

3.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

- 환경부 +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⇒ 「기후에너지환경부」 신설
 - 환경부를 환경·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(산업부 제2차관 이관*)
 - *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,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
 -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(←기재부)
 -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'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개편 및 기능 강화

4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

-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⇒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」 신설
 -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,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(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)
 - 위원정수를 5인(상임5)에서 7인(상임3, 비상임 4)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
 -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

5.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

※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

- 검찰청 폐지 ⇒ 「공소청」, 「중대범죄수사청」 신설
 - 주요방향 및 원칙*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
 - * 공소 제기·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
 -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
 -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, 당·정·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

6.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

☐ 「과학기술부총리」 신설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」 개편

-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·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* (과기정통부장관 겸임)하고,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(실) 설치
* 사회부총리(교육부장관 겸임)는 넓은 정책 범위,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
-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'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(대통령 소속)' 개편('25.9.4. 시행)

7.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

☐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⇒ 제2차관(소상공인 전담)

-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,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(제1차관은 중소기업·창업벤처 담당)
-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, 지원·육성(창업 촉진, 판로 확보 등)과 보호(상생협력, 폐업·재기 지원 등),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

8.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

☐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⇒ 차관급 본부 격상

-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(실장급)를 격상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·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
-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,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

9. 국가데이터처 개편 (통계청 승격)

☐ 통계청 ⇒ 「국가데이터처(국무총리 소속)」로 격상

- 국가통계의 총괄·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
-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데이터 연계·활용 기능 등을 강화

10.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

☐ 여성가족부 ⇒ 「성평등가족부」 개편

-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,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
- 경제활동 촉진,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,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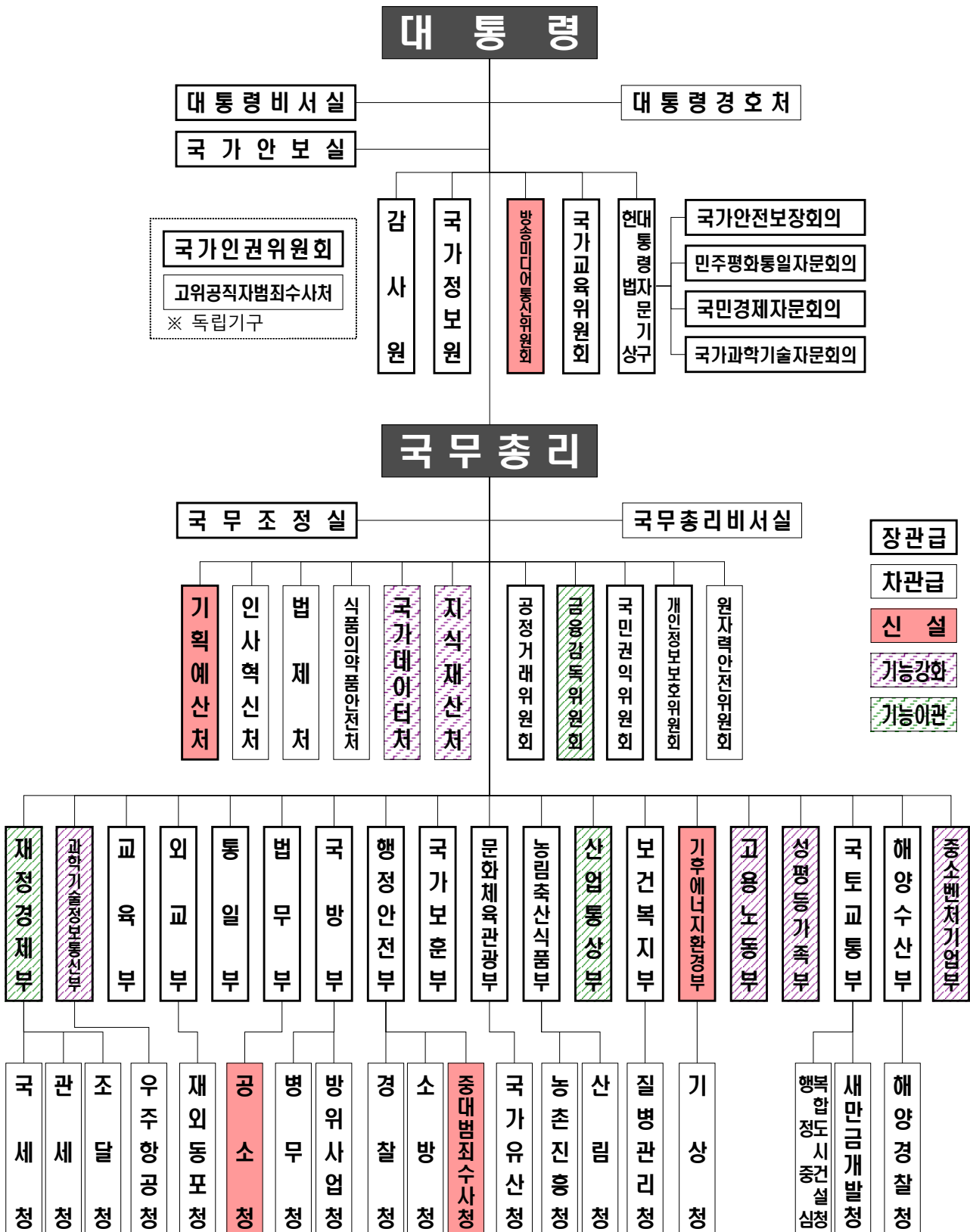
11. 지식재산처 개편 (특허청 승격)

☐ 특허청 ⇒ 「지식재산처(국무총리 소속)」로 격상

- 지식재산의 총괄·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, 창출·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
- 지식재산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·보호협력,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

개편 후 정부 기구도

※ (중앙행정기관) 19부 3처 20청 6위원회(48개) ⇒ 19부 6처 19청 6위원회(50개, +3처△1청)



참고 2

정부조직개편 개관

신설 기능강화 기능이관

